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금융 쓰나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08년 12월 5일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복잡계적 관점에서 본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3.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혁과제

1. 문제의 제기

□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위기를 소위 대처리즘, 레이건노믹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실험의 실패로 단정하고 규제완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지난 20여 년간의 전 세계적인 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학계나 과거 10여 년간의 큰 정부 정책패러다임을 추진했던 정치권이 MB노믹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하이에크의 시장관(市場觀)인 “자생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함.

□ 이 자료는 복잡계 경제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과연 신자유주의가 그 원인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대처방안과 향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혁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복잡계 관점에서 본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 미국의 금융위기를 1980년대 이후 대처와 레이건에 의해 주도된 자유시장경제개혁, 혹은 신자유주의개혁의 후유증으로 보고 시장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금융규제완화가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되며,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
- 심지어 한국에서조차 규제완화 보다도 과거 정부개입패러다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실증적 근거가 약한 주장으로 보임.

□ 복잡계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미국금융위기는 30여 년 전, 혹은 짧게는 10여 년 전의 미국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제도개혁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가. 복잡계의 증폭(amplification)을 수반하는 진화과정이 변화, 발전의 과정임.

□ 나비효과: 아마존의 나비의 날개 짓이 만든 파장이 잠자리의 날개 짓이 만든 파장과 만나 증폭되고, 독수리의 파장을 만나 더 증폭되고..... 남미에서 북미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파장을 만나 증폭되어, 마이아미에 이르러 토네이도로 발전되는 현상 → 변화, 발전현상

□ 창발현상: 60-100조의 세포가 모여 세포덩어리가 아닌 생명현상을 만들어 내는 창발현상 → 변화, 발전현상

나. 미국 금융위기는 바로 복잡계 현상의 전형임.

□ 미국 경제학계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버블이 일어나고 꺼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음 (예: Robert Shiller, 「The Subprime Solution」, 2008)

- 버블(bubble)이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시장에 퍼지고 이것이 더 전염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은 계속 집을 구매하고, 은행은 계속 모기지대출을 늘리고, 주택금융공사는 계속 보증을 늘리고, 투자은행은 MBS를 계속 발행하여 증시에 공급하고 증권투자자들은 계속 MBS를 사들이고 하는 사회적 전염과정을 통해 낙관적 전망이 퍼지는 과정으로, 이러한 기대가 어느 날 깨지기 시작하면서 풍선이 터지듯이 버블이

꺼지게(burst) 되는데 지금의 미국 금융위기는 바로 주택시장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음.

-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융자율화를 이용한 월스트리트 금융기관과 금융인들의 탐욕이 이러한 버블을 만들어 냈다고 봄.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왜 버블이 처음부터 생겼고, 왜 꺼지게 되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버블로 설명하는 이론은 동어반복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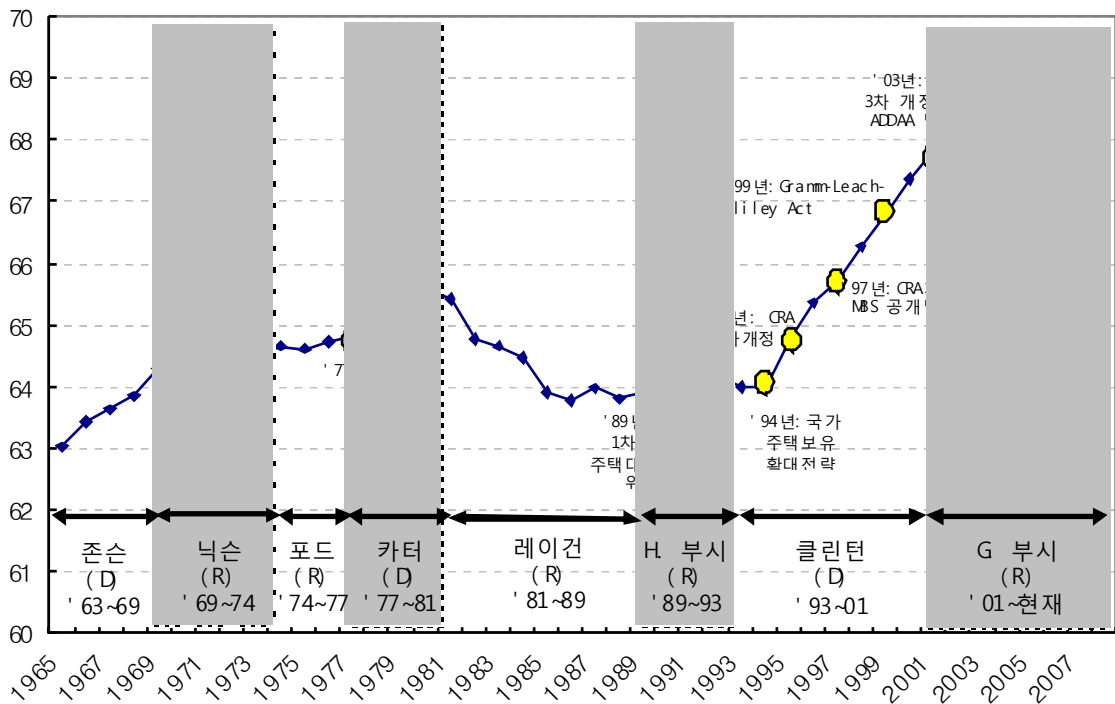
- 그리고 금융인들은 원래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희생양 찾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됨.

□ 복잡계 관점에서 보면 보다 쉽게 금융위기의 증폭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금융위기의 단초는,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저소득계층의 주택소유를 확대해야한다는 미국 정치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촉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의 정치권이 지난 10여 년간 “저소득 무주택자, 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권회사들에게 공짜점심파티”를 제공한 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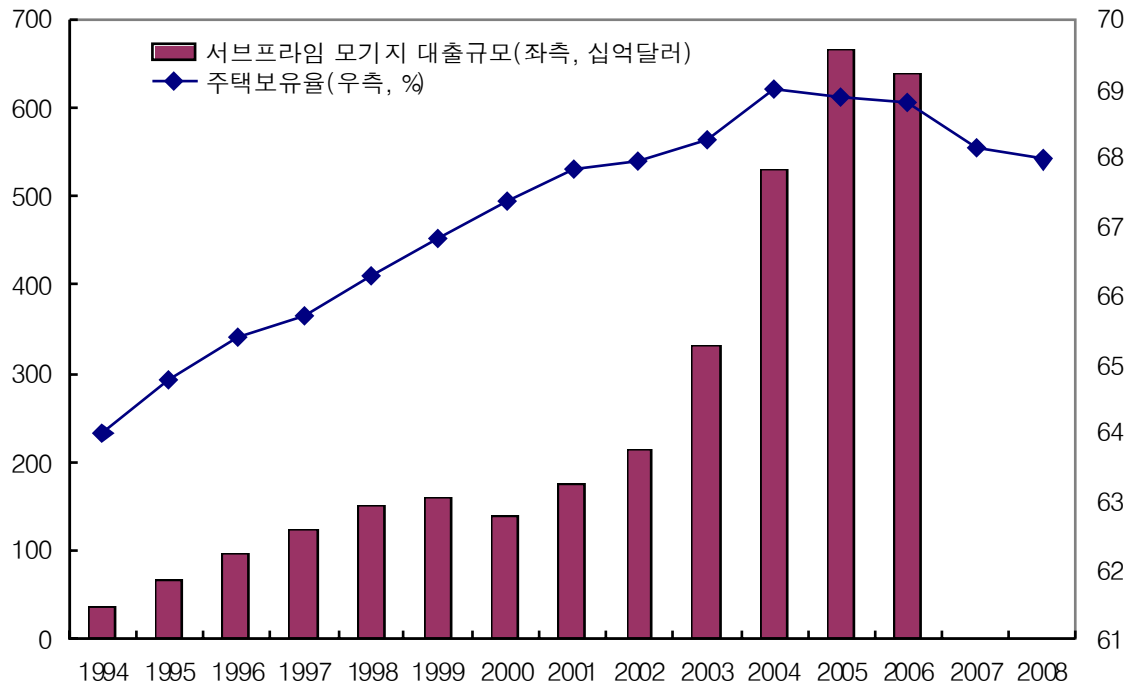
□ 주택시장 버블의 원인과 진행과정 : 나비효과와 증폭과정

- 1) 1977년 카터정부: 낙후지역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입법화
- 2) 1981- 89, 자유 시장경제를 강조한 레이건 정부 하에서 거의 활성화되지 못함 ➡ 자가 주택 보유율은 오히려 크게 감소. 그러나 미국 경제는 이 시기에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3) 1989년 CRA 1차 개정: CRA 대출의 양 평가는 없고 업무취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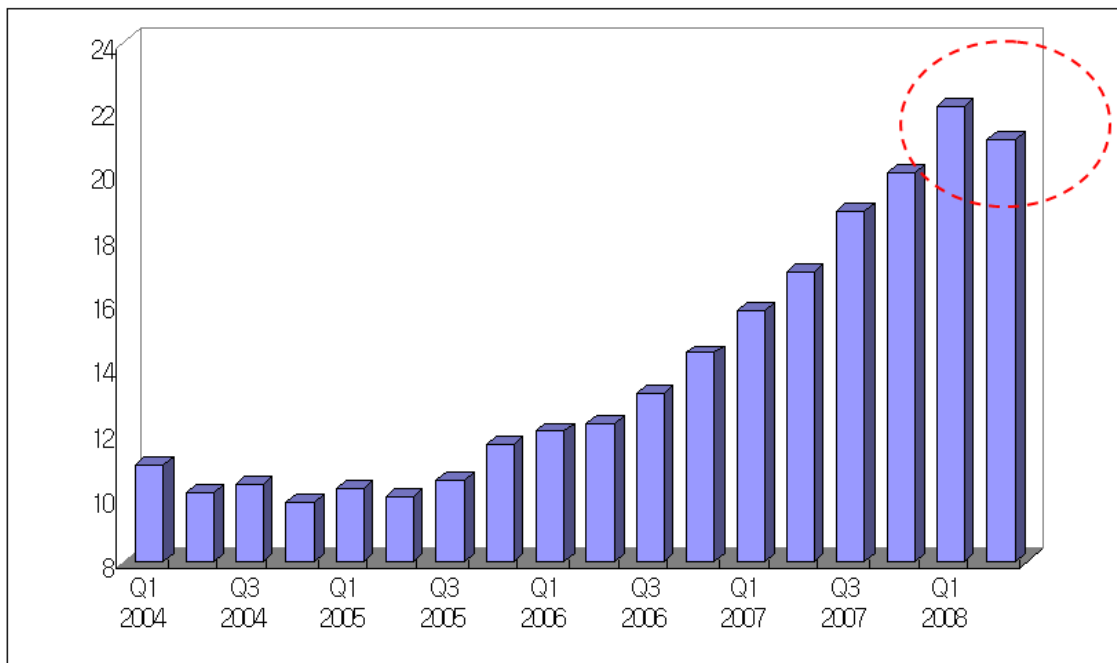
- 를 평가기준으로 선정 (주택대부조합 위기발생)
- 4) 클린턴 정부는 취임 후 1994년 국가 주택보유 확대전략(National Homeownership Strategy) 수립
 - 5) 1995년 CRA 2차개정: a)금융기관에 주택대출심사완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지점설치나 M&A에대한 허가시 CRA대출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채택 b) 주택공사(패니매, 프레디맥)의 보증확대 ➡ subprime 모기지 활성화 기반 마련➡주택시장의 공짜점심시대 활짝 개막➡주택시장 버블의 결정적인 초기 원인 제공
 - 6) 1996년, 주택도시개발국이 패니매, 프레디 맥으로하여금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증권을 매입하도록 조치➡ MBS시장 활성화기반 마련
 - 7) 1997년 CRA에 기초한 MBS 최초발행(Bear Sterns가 최초의 투자은행) ➡주택금융 추가 활성화



<그림 1> 미국의 자가주택보유비중 추이와 CRA개정 등 주택금융시장 관련 주요 사건



<그림 2> 주택보유율과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규모



<그림 3> 서브프라임 대출 연체율 추이

- 8) 1998년 Gramm-Leach-Bliley Act(Glass-Steagall법 폐지)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 통합허용.➡MBS발행과 거래, 모기지시장 추가 활성화
- 9) 2000년부터 닷컴버블붕괴로 저금리정책기조전환 → 2001년 9.11테러 이후 저금리 정책 고착화 ➡주택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부양효과
- 10) 2003년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보증)업무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시도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
- 11) 2003년 부시 행정부는 재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시초기 납입금(downpayment)과 매매거래비용(closing costs) 등을 10,000달러까지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American Dream Downpayment Assistance Act**를 도입하여 무주택 저소득층과 소수인종들의 주택매입 진작책을 취함 ➡주택시장 버블을 증폭시키는데 기여. 그러나 클린턴의 '95년 CRA 강화처럼 반시장적이지는 않음.
- 12) 2005년 3차개정, CRA 대상금융기관의 최저자산규모를 확대(2억 5천만에서 10억달러로 인상)➡서브프라임대출 축소효과,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음.
- 13) 그동안의 버블형성으로 2004, 2005, 2006년 모기지대출 급증
- 14) 2004년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
- 15) 2004, 2005, 2006년에 확대된 모기지 대출의 상환 부담이 2006년에서부터 고금리와 원금상환개시에 맞물려 크게 증가하면서 연체율과 지불불능사태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주택시장의 공짜점심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

➡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

다. 미국금융위기의 원인

□ 미국의 금융위기를 미국 거시 경제지표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 주택 보유율이나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경제성장률, 실질금리 등과

높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미국 주택보유율의 급격한 상승과 주요 거시경제지표와의 상관성은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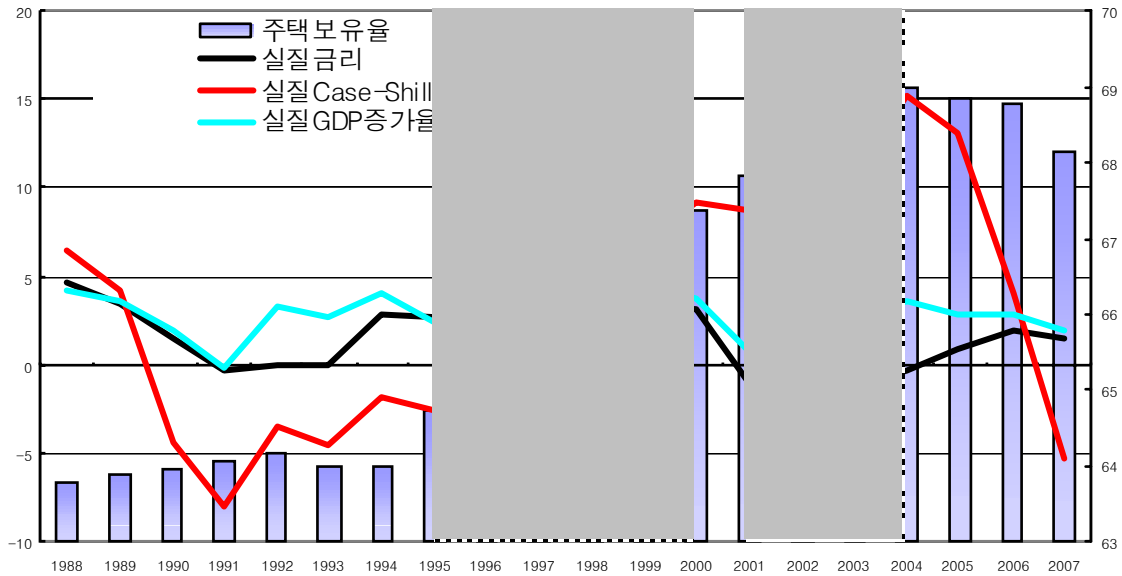
- 주택보유율과 실질 GDP 증가율, 실질금리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08과 -0.37을 기록
- 변수들의 정상성(stationarity)을 고려하여 차분의 형태로 상관계수를 도출할 경우 주택보유율 차분과 실질주택가격 증가율 차분, 실질 GDP증가율, 실질금리 차분의 상관계수는 각각 0.62, 0.20, 0.33으로 나타남.

<표 1> 주요 거시변수와 주택보유율과의 상관계수

	주택보유율	실질주택가격 증가율	실질GDP 증가율	실질금리
주택보유율	1.00	0.69	-0.08	-0.37
실질주택가격 증가율	0.69	1.00	0.27	-0.09
실질GDP 증가율	-0.08	0.27	1.00	0.68
실질금리	-0.37	-0.09	0.68	1.00

주: 시계열의 정상성(stationarity)을 고려하여 주택보유율, 실질주택가격증가율, 실질금리 등 변수의 차분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택보유율, 실질주택가격과 실질금리와의 상관계수는 주택가격과 주택보유율사이의 상관계수보다 현저히 낮게 나옴. 차분형태의 경우 주택보유율과 실질금리, 실질주택가격, 실질GDP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33, 0.62, 0.20을 기록

자료 : U.S. Census Bureau; 한국은행 ECOS DB



<그림 4> 미국의 거시경제 및 주택시장 관련 자료

- 따라서 미국금융위기는 앞에서 살펴 본봐와 같이 시장의 실패를 조장한 정부의 반 시장적 개입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대처리즘이나 레이건노믹스의 실패로 보기는 어려움.
- 특이한 것은 레이건 시대는 미국 주택보유율이 하향 안정되었다는 점임.
 -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적격이 아닌 사람에게 모기지대출을 제공하여 집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시한폭탄을 안기는 것과 같음. ➡주택의 소유는 대단히 위험부담이 큰 투자행위이며 지불능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은 임대를 통해 주거서비스(shelter)를 공급하는 것임. 이러한 선택은 시장의 금융배분기능의 자유로운 작동을 통해 이루어짐.
 -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다면 이는 바로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촉진함으로써 차등의 확산과 불평등의 양산을 통해 발전이 촉진된 것임. 신자유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한 주의가 아님. 모두 같아지지 않는지만 모두 발전하는 차등발전

으로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것임.

□ 시장과 제도, 그리고 정부의 역할: 복잡계 관점에서 볼 때 클린턴 정부의 개입은 시장기능에 역행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시장경제는 언제나 불완전함.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한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함. 그래서 경제제도, 즉 시장의 경기규칙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항상 양의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
-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 혹은 시장이 실패한다는 것은 시장이 거래비용 때문에 잘하는 경제주체와 그렇지 못한 경제주체를 식별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함. 시장의 차별화기능의 고장을 시장실패라 함.
- 정부의 개입이 시장실패를 조장하는 경우란 바로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훼손하는 제도를 만들어 냄으로써 시장기능을 저해할 경우를 말함.
- 클린턴 정부의 CRA강화를 통한 모기지대출 확대조치는 바로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반 시장적 조치임▶은행의 기본기능은 대출심사기능을 통해 적격자와 비적격자를 차별화하는 일임. 그러나 CRA는 비적격자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조장하는 결과 초래
- 부시정부의 '03년 ADDA Act도 무주택자들의 주택소유수요를 늘림으로써 버블을 증폭시키는 일을 했지만 은행의 모기지대출 행위에 인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탓에 반시장적이라 할 수는 없음. 그러나 부시의 정책 또한 지금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

□ 결론적으로 미국 민주주의(특히 민주당)의 평등주의 이념, 즉 낙후지역을 보다 발전시켜야하며 저소득계층도 다 집을 소유해야한다는 지역 및 사회의 균형발전의 이상을 무리하게 추구한 소위 금융민주주의(Financial Democracy)가 미국금융시장위기의 근본 원인임.

- 이러한 이념 하에 은행의 대출심사에 대한 감독이 이완되고 오히려 은행, 주택금융공사나 증권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일련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금융제도상의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버블이 증폭되고 결국 꺼지게 된 것임.
- 1998년의 금융자유화법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자체로서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타이밍 상 잘못된 버블이 더 확대되는 증폭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임.
-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도 주어진 제도하에서 돈벌이에 열심히 나섬으로써 버블을 증폭시킨 책임은 있으나 이것이 근본원인일 수는 없으며 이들은 파산을 통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해서 보면 작금 국내 논쟁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자유 시장경제철학 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정책 패러다임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처리즘이나 레이건노믹스는 물론 유사한 철학을 내건 MB노믹스도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 할 것임. 금융위기의 본질은 정부의 반시장적 개입이 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임.

라. 몇 가지 시사점

1) 금융 산업, 독자적 고부가가치산업일 수 있을까?

- 그 동안 금융 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략산업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폄하했으나, 이번의 금융위기는 결국 금융은 실물부문의 수요에 의해서 파생되는 산업(derivative industry)일 수밖에 없으며 실물부문의 기초없이 금융만 발전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고 할 수 있음.
- 금융은 중개서비스 산업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금융자유화란 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여 희소한 금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금융과생상품 또한 이 범주를 벗어 날 수 없음. 파생상품이 독자적인 부가가치창출산업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임.

2)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대안은 무엇인가?

- 주택의 소유는 위험부담이 높은 투자이므로 주택소유여부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주택구매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과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이 보다 원활히 작동되도록 시장친화적인 제도개혁을 하는 일임.
-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서도 배제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저렴하게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반시장적 규제나 제도 개악은 피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주택소유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부의지가 표명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국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무리하게 반시장적인 개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임.

마. 금융위기의 대처방안과 향후 전망

- 대처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가능

- 공짜 점심 값을 각자가 부담하는 방안: 시장원리에 따라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부실 금융기관, 부실 차입자들이 각각 책임을 지는 방안
- 정부가 구제(bail-out)하는 방안: 금융시스템의 붕괴가능성과 실물 부문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정부가 부실을 떠안는 방안
- 시장안정을 위한 신뢰확보측면에서 개입하는 정도, 타이밍,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다를 수 있음.

□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책임도 크고, 시스템 붕괴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구제조치가 불가피함.

□ 그러나 이러한 단기 처방이 효과가 있어 다행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근본원인인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반시장적 주택시장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유사한 금융위기는 또 잉태될 가능성이 큼.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금융위기가 외환시장과 원화시장 등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달러 및 원화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증시부양이나 환율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전제로 한 외환시장 정책과 같은 인위적인 직접개입은 자제해야 됨.

-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은행부문에 자금을 공급하여 은행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겠으나 은행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즉 대출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강제할 수는 없음. ➡실물 부문에 대한 영향 불가피?

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래 우려된다.

민주주의 평등의 이념 과잉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 버블의 원인이 반시장적 정부개입에서 시작되고 그 수습에 있어서도 점점 모든 은행과, 저소득 주택보유자를 구제하고, 나아가 실물 부문의 부실기업을 구제하는 등 구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지금의 공짜점심 파티가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인가?
- 올바른 해법은 강한 금융기관, 강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M&A에 나설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자율에 의해 부실청소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임. ➡ 그리고 시장원리에 따라 주택 소유와 임대행위가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함.

지금과 같은 모두 살리는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기 정체와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 배제 못함.

- 놀라운 것은 전 세계(한국까지 포함하여)가 일말의 재고도 없이 과감한 모두 살리기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에 대해 주류 경제학은 한마디 항변도 없다는 점임. 경제학은 이미 사회(민주)주의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는가?

3.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혁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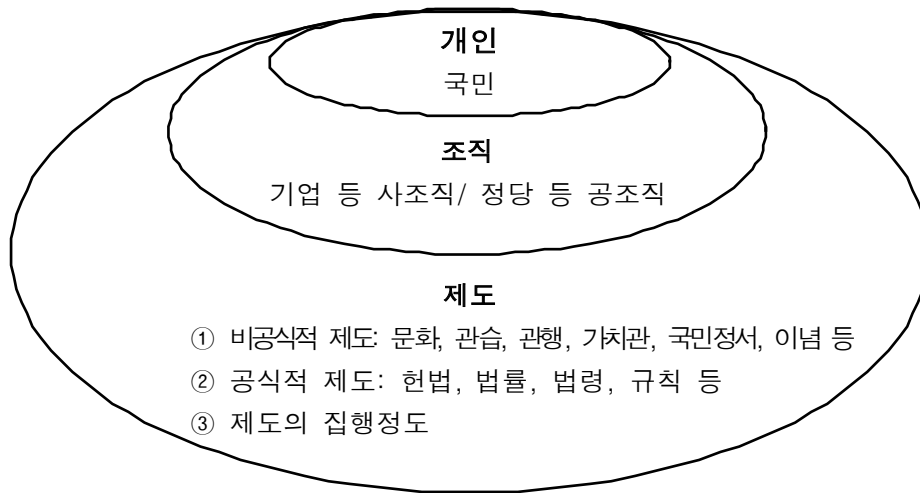
가. 국민의 세계관, 즉 이념은 중요한 경제제도임.

시장경제란 일정한 경기규칙 속에서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각자의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일종의 운동경기장과 같음. 여기서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의 내용이 달라지고 경기자들의 승패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

한 경기규칙을 일컬어 경제제도라 함.

-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내용을 바꾸기 위해 경기자들이 신경써야하는 불편함을 일컬어 거래 비용이라 함. 시장경제에서 거래비용이란 정보의 불확실성과 미래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경제주체들이 현실 거래를 통하여 서로 간에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온갖 노력, 시간, 돈 등을 말함.
-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시장의 경기규칙인 각종 경제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잘 지키도록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부담해야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 준다는 것을 의미
- 경제제도는 국가의 각종 법과 제도를 포함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외생적 여건으로, 이러한 경제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경제활동에 친화적일 수록, 개별경제주체들과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거래비용은 그만큼 낮아지게 됨.
- 따라서 경제제도는 거래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사회 유인구조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 나아가 그 사회의 변화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침. 그래서 한 나라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은 그 나라의 경제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가 국민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의미

<그림 5> 경제·사회의 제도적 구성



출처: 『신 국부론』 (좌승희, 2006), 110 쪽

□ 국가의 경제제도는 비공식적 제도, 공식적 제도, 제도의 집행 등으로 구성

- 비공식적 제도란 문화, 관습, 관행, 국민정서, 이념과 같이 공식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행동에 비공식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사회의 공통적인 생각들을 통칭함.
- 공식적 제도란 헌법, 각종 법률, 정부가 정하는 규칙, 명령, 정부규제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모든 공식적 제약을 포함
- 제도 집행의 정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경기규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말함.

□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정서 등도 공식적인 법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함.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법집행도 대단히 중요함.(<그림 3> 참조)

□ 특히 20세기이후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이념이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좌승희,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2008, 참조)

- 복잡계 발전원리에 의하면,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보듯 그리고 역사적 경험도 그렇고, 경제평등주의 이념에 기초한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전역행적인 결과를 초래했음.

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혁과제 (좌승희, 2008 참조)

1) 비공식적 제도, 국민의 세계관(이념)을 바꾸어내야 함.

가) 모든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함.

□ 발전은 국민개개인이 이루는 것임. 따라서 국민들이 약자라야 국가로부터 대접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함. “사회정의”란 실패한 사람이 더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이 더 대접 받는 것임을 일깨워야 함. 그 동안 한국사회는 이와는 정 반대의 길을 향해 걸어왔음. 중소기업, 농민, 근로자, 지방, 지방대학, 낙후지역이라야 대접받을 수 있다는 발전 역행적 생각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음.

□ 평등의 이념에 고착되어 획일적 균형과 평등을 요구하고 자기의 실패를 남의 탓, 사회 탓하는 국민과 이런 이념을 증폭시키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의 선진화는 요원한 꿈이 될 것임. 어떻게 해야 국민들을 자조(self-help)하는 국민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음. 단지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임. 홀로 일어서고 성공하는 국민 주체들을 더 우대해야 함.

나) 경제력의 집중과 특정지역에의 집적, 불균형을 두려워하면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없음.

- 복잡계 발전원리에 의하면 발전은 모두 나아지지만 결코 같아지지 않는 과정임. 경제력집중과 집적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 없이 발전은 없음. 따라서 부자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대기업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좋은 대학들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류대학이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강남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에도 강남이 여럿 생기게 하는 것이 발전을 일으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됨. 삼성이 보기 싫다고 청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삼성이 생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됨.

다) 성장하는 기업을 우대해야 함.

- 복잡계 발전원리에 의하면 성장하는 일류 기업이 없이 발전은 없음.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양산되는 과정이 경제발전의 과정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각종 경제제도를 고쳐나가야 함. 그래서 과감한 기업규제완화는 필수적임.
- 그러나 기업은 본질적으로 시장보다 비민주적이고 그 내부거래는 불투명하다 하였음. 이것이 경제발전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면도 있음. 그러나 기업개혁이 이러한 기업본질을 훼손하게 되면 발전은 어려워짐.

라) 일류를 일류로 대접해야 함.

- 복잡계 발전원리에 의하면 시너지 창출원인 흥하는 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길만이 흥하는 자들을 양산함으로써 흥하는 경제를 만들어 내는 길임. 일류를 일류로 대접함으로써만 더 많은 일류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를 일컬어 경제적 차별화원리라 함.

- 여기서 “일류”나 “흥하는 자”라는 표현은 상대적 개념임. 단지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남에게 교훈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모델, 즉 시너지를 창출하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의미함.

□ 싱가포르, 홍콩, 중국, 두바이 등 역동적인 경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계 일류기업, 일류 혁신가들이 몰려들어 경제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경제야 말로 바로 세계 500대기업의 35% 이상과 모든 경제사회분야의 세계 최고 일류들의 집산지임을 잊어서는 안 됨.

2) 공식적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바로 잡아야 함.

- 가) 헌법상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견어내야 발전 친화적 경제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나)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획일적 지방 육성정책에서 탈피해야 균형 발전 가능함.
- 다) 평준화교육 탈피와 대학 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해야 지식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있음.
- 라) 누진세와 부유세로 부자를 역차별 하지 마라. 선진국을 어떻게 정의하든 선진국은 부국을 의미함. 따라서 부자가 양산되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음.
- 마) 복지정책은 향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가난이 국가로부터 대접 받을 자격이 되고 그래서 가난이 특권이나 자량이 되어서는 안 됨.
- 바) 대기업을 역차별 하지 마라.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 없이는 발전도 없음.

- 사) 중소기업이라고 특별하지도 않으며, 특별대우를 받아서도 안 됨. 중소기업인 것이 특권이 되서는 안 되며 오직 잘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접 받도록 해야 함.
- 아) 금융 산업과 금융기업의 대형화 시급함. 국내외 자본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자) 농업을 농민으로부터, 그리고 농민을 농토에서 해방시켜야 함.
- 차)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이라서 정당성이 없다는 국민인식이 바뀌어야 함.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투자도 돈을 버는 것도 불로소득임.
- 카)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데도, 정부가 서비스업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고,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함.
- 타) 정부가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남에게 교훈과 노하우, 즉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들의 편이 되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결과평등을 위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규제가 늘어나게 되고 실패는 양산되고 발전은 정체됨. 정치적으로 쓴 약이지만 성공하는 자를 우대하는 길 외에 국민성공 시대를 열 방법은 없어 보임.
- 파)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함. 일류를 일류로 대접할 줄 아는 리더만이 국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음.

<참고문헌>

- 좌승희(2006), 「신 국부론」, 굿인포메이션
- (2008),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도서출판 지평
- (2008), "MB노믹스, 금융쓰나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복잡계 관점에서 본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그리고 MB 노믹스의 제도개혁과제-", 한국제도·경제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10월 10일
- · 황상연(2008),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MB노믹스, 금융쓰나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복잡계 관점에서 본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CEO 리포트 NO. 24.
- Shiller, Robert(2008), 「The Subprime Solution : How Today's Global Financial Crisis Happened,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